

국힘, 정책위 기능 강화... 정부 정책 발표전 당정협의 의무화

‘유명무실’ 6개 정조위 풀가동... 정책 개발·여론 살피 논란 최소화 비공개 실무 당정협 수시 개최 계획... 여의도연구원도 본격 활동

국민의힘 김기현(號)가 박대출 신임 정책위의장 임명을 계기로 정책위 기능 강화에 나선다. 26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책위는 우선 박 신임 의장을 중심으로 산하 정책조정위원회(정조위) 기능 복원에 들어간다. 정책위에는 경제, 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6개 정조위가 있다. 각 정조위 위원장에게 관련 정책 쟁점을 강하게 주문하고 후속 조치를 점검하게 한다는 게 김 대표 방침이다. 특히 정조위 소속 의원들이 정책을 자체 개발하거나 정부에 정책 개발을 요구하는 한편, 민생 현안

이 발생하면 민심이나 여론을 꼼꼼히 살피 논란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정조위 풀가동’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김용환 당 대표실 상황실장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그간 유명무실했던 정조위 운영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해 당 정책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앞으로 정책 드라이브를 세계 걸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책위의장 산하 부의장을 기존 1명에서 3~4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부의장에는 재선의 이만희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부의장을 여러 명 두는 건 당정협의 당 중심이 아니라 여의도 연구원 위주로 보인다고. 당은 앞으로 정부의 주요 정책 발표 전 당정협의를 사실상 의무화하고, 비공개 실무 당정협의 회도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지난 19일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책 입안 발표 이전에 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참모들에게 정책에 관한 정부·여당의 긴밀한 소통과 당의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개발의 또 다른 축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에는 초선의 박수영 의원이 내정된 상태인데, 박 의원은 오는 27일 취임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현역 의원이 여원 의장을 맡는 것은 2019년 김세연 전 의원 이후 4년 만이다. 김 대표의 정책위 강화 방침은 정권 교체 이후 빈번하게 불거진 정책 혼선과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달여 만의 ‘초등학교 5세 입학’부터 최근 ‘주 69시간 근로제 개편’ 논란까지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힌 정책들 이면엔 당정간 협의 부족이 있었고, 이는 당 정책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결과라는 게 김 대표 인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이상 국민의힘 전신) 시절 대선·지방선거·총선까지 3연패를 겪은 데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당정 불화가 컸던 이준석 전 대표 체제와 이후 비대위를 거치면서 정책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정책위 기능 강화에는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정국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셈법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 안팎에선 양곡관리법·간호법·방송법 등 최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에 대해 여당이 ‘여소야대’라는 한탄만 한 채 제대로 여론전조차 펼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기존 6개 정조위를 기본으로 조직의 허리와 실무를 튼튼하게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된 프레임으로 정부 정책 의미를 퇴색시키고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세력들의 반발을 감안하더라도 국민에게 우리 정책을 잘 전달해야 한다고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책 혼선으로 비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운데)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지난 24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 현충원역 환승주차장에서 대전 지역 현안과 관련한 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검수완박 유효 판결’ 비판

SNS에 “좌파 성향 재판관이 편파 판결” 주장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하고도 법 효력을 유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민·우·국 카르텔”의 반(反)헌법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SNS에서 “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정당 카르텔’이 내린 이번 결정은 자신을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관 9명 중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5명의 재판관이 우리법연구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국제인권법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좌파 성향’의 재판관이어서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을 한 당사자들이 재판관 이름을 감히 참칭하는 것

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곡학아세한 당신들을 물엿지 혐의도 징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도질”을 해 빼앗아 갔는데도 ‘일단 빼앗기만 하면 유효’라는 논리는 미개한 원시국가에서나 통할 것이지,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의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도 신적폐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 뿌리를 틀고 앉아 자신들의 권력 철막을 지키기에만 매달리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당은 나라를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되돌려놓기 위해, 신적폐 세력의 몰상식에 대응해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5·18 피해자 생활·정책 만족도 주기적 파악

조오섭 의원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오섭(북구갑) 국회의원이 26일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의 생활실태와 정책만족도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도록 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헌정질서 파괴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다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등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갈수록 고령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은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보상금, 의료지원금, 상담프로그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사회적·경제적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피해 당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정책을 강화하

도록 했다. 조오섭 의원은 “그동안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생활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지 않아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남 동부권 의료인프라 구축 시민 토론회

김회재 의원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여수율) 국회의원이 ‘여수 대학병원설립, 전남 동부권 의료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여수 시민회관에서 진행된 이 토론회에는 전남도의원, 여수시의원, 바르게살기운동 여수시협의회 등 시민단체, 언론사와 여수시민 등 각계각층에서 7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토론회는 최정필 여수시위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시민 대토론회 1부에서는 김회재 의원과 박기영 순천대학교 의대설립 추진단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정현주 여수시위원과 바르게살기운동 여수시협의회 오기봉 부회장의 토론과 질의응답



이 진행됐다. 김 의원은 ‘전남 동부권 화합·영호남 상생 의료인프라 구축, 여수 대학병원·순천의대 설립이 답입니다’라는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모두 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고, 전국 12곳에서 의대 유지를 추진 중이다”면서 “씨를 뿌려야 곡식을 얻는데, 여수를 포함한 전남 동부권도 의대·대학병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주문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 건물 리모델링
- 칼라강판 지붕공사
-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 전원주택신축
- 공장신축
- 징크판넬시공
- 창호(샷시)교체
- 농막
- 옥상스틸방수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